

## 타이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퍼쿰모델'에서 '탐마랏모델'로

박은홍

### '쿠데타의 나라' 어떻게 바뀌었나?

1932년 이래 60년 동안 타이에서는 총 17번의 쿠데타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열 번은 성공하였고 일곱 번은 실패하는 등 사실상 근대화 기간의 대부분을 군부 통치하에서 보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후 군부의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 특히 1992년 민주화 이후 군부는 타이 정치무대 전면에서 퇴장하였다.

타이는 경제적 위기없이 민주화가 진행된 이른바 '위기없는 이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집권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두 번에 걸친 권력교환을 민주화 정도의 형식적 지표로 내세우는 논의를 따를 경우 타이는 이미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타이에서 비타협적 민주화 전략은 그때마다 실패하였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 양식과 유사하게 타이에서의 민주화 역시 군부권력과 반대세력의 타협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협상과 타협이 성사되는 과정에 국왕이 깊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타이 정치에서 국왕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민주

화세력이 '안전벨브'에 해당하는 왕실에 도전하였을 때 국왕은 군부와의 제휴를 통해 현상유지에 성공하였다. 다른 한편 군부정권하에서의 '국가의 실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 대규모화하였을 때 국왕은 시민사회와 군부 간의 타협을 중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타이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이 비교적 적은 이유를 국왕의 존재에서 찾는다.

타이에서 국왕은 기존의 존재이며 어느 누구도 국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다. 국왕은 종교의 수호자이자 군의 통수권자이다. 국왕의 절대적 지지기반은 농촌-대중 사회이다. 물론 농촌-대중 사회는 군부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농촌-대중 사회에서 일어났다. 1992년 5월의 민주화 시위가 도시-엘리트 사회를 뛰어넘어 농촌-대중 사회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타이에서의 민주화는 '민중헌법'으로까지도 일컬어진 1997년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계기로 공고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특히 사상과 정치활동을 제약하던 반공법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타이의 시민사회는 국왕과 왕실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양심수 문제도 사라졌다. 이렇듯 새로운 헌법은 '퍼쿤모델'의 타이 정치를 '탐마랏모델'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퍼쿤정치'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근대화의 초석이 마련되던 시점에서 서구형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개발독재자 싸릿이 도입한 통치원리였다. '퍼'는 타이어로 아버지, '쿤'은 국왕을 의미한다. 타이 왕국을 건국한 13세기 수코타이 왕조의 람감행 대왕이 통치자로서의 국왕의 위상을 퍼쿤, 즉 '자비로운 대왕'으로 이름지은 것이 단서가 되었다. 즉, '퍼쿤모델'은 가부장적 통치를 의미한다.

반면 '탐마랏'은 불법(佛法)에 따른 통치로서 옛 제도를 대체한 좋은 통치구조(good governance)를 의미한다. 1973년 10월 14일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였던 티라웃 분미에 의해 널리 알려진 이 용어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대폭 확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통치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탐마랏모델'은 1997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티라웃 분미는 언론을 통해 당시의 위기상황을 '제2차 랏따나꼬신 위기'라고 표현하였다.<sup>1</sup>

당시 사회적 문제는 전례없이 심각하였다. 외채는 5조 바트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는 하나의 도로, 하나의 병원은커녕 한 명의 공무원도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사회는 황폐화되었고 국민들은 절망 상태에 있었다. 이때 티라웃 분미에 의해 제기된 개념이 '탐마랏'이었다. 어의상 '탐마랏'은 불법佛法에 따른 통치를 뜻한다. 티라웃 분미는 관료와 기업부문에 대한 민중 부문의 감시가 취약하였던 데에서 경제위기가 야기되었다고 판단하고 투명성, 정당성, 책임성, 효과성을 담보하는 행정과 통치구조를 조직하기 위한 공공부문, 사회부문, 사적 부문 간의 협력을 '탐마랏'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탐마랏모델'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가권력과 기업부문의 가부장적 지배를 정당화한 '퍼쿤모델'에서 찾는 지식인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퍼쿤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연고주의, 부패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제위기를 초래한 '국가의 실패'란 곧 '퍼쿤모델'의 한계라는 인식이 '탐마랏'을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 **'퍼쿤모델' 과 국가주의**

타이에서의 1932년은 입헌혁명이 일어났던 해로서 근대적 정치로의 분수령을 이룬다. 특히 프랑스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혁명의 주역이 되었던 빠리디는 급진적인 개혁안을 준비하였다. 1932년 입헌혁명에 동참한 민간관료들 중 핵심적인 브레인이었던 빠리디는 타이와 같이 저발전 국가들의 경제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념으로서 사회주의, 자유주의,

---

1 1782년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랏따나꼬신 왕조는 짝끄리 왕조, 방콕 왕조라고 불리며 라마 5세 쥘라롱껀 왕 때 근대적 개혁 시도가 있었다.

협동주의를 제창하였다. 우선 뿌리디의 협동사회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공무원 신분이 된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직접세, 간접세, 국내외로부터의 차입, 복권사업 등에서 마련된다.

그러나 뿌리디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개인 자산에 대한 몰수를 비롯하여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없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설사 토지나 민간기업에 대한 몰수나 국유화가 있더라도 '공산주의적 수탈 방식'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뿌리디의 개혁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족을 파멸로 이끄는 공산주의 프로젝트라고 비난하였다. 반면 그를 인민을 행복과 번영으로 이끌려는 민주민족주의자라고 찬사를 보내는 지지층도 있었다. 뿌리디는 자신이 자본주의를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사회주의자임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1932년 혁명을 보다 개방적이고 평등한 정치·사회체제로 이끌려고 했던 세력들이 점차 궁지에 몰렸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노동자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첫 파업이 있자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었다. 1932년 6월부터 12월까지 10개 신문사가 문을 닫았다. 불교 승가에 대한 왕실과 귀족들의 통제를 거부하는 승려들의 운동도 억압되었다.

마침내 뿌리디의 급진적 개혁안으로 인해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자 수상은 의회를 해산해 버렸다. 뿌리디는 망명을 떠나야 했고 사유제를 위협하는 논의 자체를 불법화하는 반공법이 채택되었다.

반면 입헌혁명을 주도한 군 수뇌부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모방하여 랏타니움, 즉 국가주의를 제창하였다. 앞장서서 일본 군국주의를 모방한 장본인은 1938년부터 1957년까지 수상직에 있었던 피분 송크람 장군이었다. 그는 육사출신으로서 프랑스에서 군사포병학을 수학하던 중 당시 프랑스에 유학 중

이던 뿌리디를 만나 입헌혁명을 계획하였다.

피분은 수상 취임 다음해인 1939년에 싸얌이라는 국명을 보다 민족적 색채를 띠는 타이(보다 정확하게는 므엥타이)라는 국명으로 바꾸었다. 이어 중부 타이어를 공식언어로 규정하고 북부, 동북부, 남부 타이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피분은 사회번영과 민족통합, 발전, 인민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수단이 바로 문화라고 규정하면서 부적절한 의복차림이나 치장까지 명시한 '타이인민 관습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인민들이 타이족의 기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를 듣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옛 고대왕국인 난짜오와 관련된 연극, 노래, 소설, 그리고 타이족의 전설적인 영토와 관련된 것도 이때 만들어졌다. 역사적 상상력에 기초하여 이상화된 난짜오 왕국은 타이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기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로의 국내정보 유포 등을 반민족적 행위로 공식화하였다. 공산주의들에 대해서는 전복과 불안정을 일삼는 '비非타이', '반反타이' 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화인과 여타 소수민족을 차별하여 타이 민족만의 번영을 희구, 국기와 국가, 왕실 찬양가 등을 민족의 상징으로 조작화하여 이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하였다. 이때 국가國歌를 작곡할 때 사용된 단어 들 역시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경제적 자립과 토착경제의 발전을 강조하는 포고령도 공포되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타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반드시 전통에 대한 고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남편이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아내에게 키스를 해야 한다든지 혹은 여성의 경우 외출시 반드시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나가야 한다는 등의 조항은 서구적 문화를 도입한 것이었다.

어떻든 군부정권 주도의 신문화정책은 옛 싸얌을 새로운 타이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었다. 정부의 포고령들은 인쇄매체나 방송 등과 같은 근대적 매체를 거쳐 타이 사회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다. 그 결과 신문을 읽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계도 대상이 되었다. 특히 문화공보부는 새로운 문화 보급정책의 주역이었다.

결국 타이의 민족문화가 국민통합이라는 이름하에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무시한 채 균질하게 되었다. 이때의 민족문화는 민주적 참여가 아닌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주의의 수단이었다. 피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군국주의 노선에 매력을 느끼면서 강력한 민족주의와 영토확장주의를 취하면서 파시스트화되었다. 2차대전 중에 피분 정권은 군국주의 일본과 공수동맹(攻守同盟)을 맺고 연합국에 선전포고까지 하였다.

반면 1943년부터 뿌리디는 비밀리에 '자유타이운동'을 전개했다. 2년 동안 일본군이 타이에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뿌리디는 반일, 반식민 활동상과 그 목적을 영국과 미국에 알리기 위해 다방면의 외교를 벌였다. 그 결과 자유타이운동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결국 전쟁이 연합국에 유리하게 되어 가자 1944년 7월 파시스트 피분 정권이 물러나고 대신 뿌리디의 지지를 받는 쿠엥을 수상으로 하는 중도파 문민내각이 들어섰다. 이를 계기로 해서 타이에서는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 5월에 제정된 헌법에서는 군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였던 뿌리디 내각은 인플레이션의 급등, 2차대전 후 예편군인의 문제, 정부관료와 여당 정치인들의 독적행위로 인해 지지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라마 8세(재위 1935~1946) 아난타 마히돈 국왕의 변사사건이 계기가 되어 뿌리디 내각은 붕괴하였다.

입헌혁명을 계기로 타이 정치는 '퍼쿤모델'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뿌리디가 주도한 급진적 국가개혁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뿌리디의 기획은 군부 주도의 국가주의에 밀려나고 말았다. 국가주의는 과거 절대왕정하에서의 '퍼쿤모델'의 근대적 변형일 뿐이었다. 일

본제국주의의 멸망이 국가주의를 한때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였다.

### ‘피쿰모델’ 과 개발주의

1957년 9월 16일 사단병력을 이끈 짜릿 육군사령관이 쿠데타를 단행하고 장기집권을 하고 있던 피분 군부세력을 추방하였다. 흥미롭게도 짜릿은 쿠데타를 ‘혁명’, 그리고 쿠데타를 주도한 새로운 권력집단을 ‘혁명위원회’라고 각각 칭하였다.

짜릿은 1949년 2월 뿌리디가 해군과 공모하여 피분 수상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부대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해군과 경찰병력에 대한 육군의 절대적 우위를 확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54년 46세에 육군사령관에, 1956년 1월에 원수, 그리고 1957년 9월에는 육해공군과 경찰병력을 아우르는 국군최고사령관직에 올랐다.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짜릿은 개발주의 노선을 천명하였다. 최고 권좌에 오른 짜릿은 “노동이 곧 돈이고 돈이 곧 행복을 수반하는 노동이다”, “흐르는 물, 밝은 전기, 좋은 도로” 등과 같은 ‘개발’ 과 ‘근대화’ 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일사불란하게 조직하였다.

1960년 2월 군 심리전 교육과정 수료식에서 짜릿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총력전’ 사상을 피력하였다. 그는 1950년대 후반에 피분에 의해 도입된 의회민주주의는 오히려 정치적 혼란, 부패, 부정을 양산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영향력만을 키웠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1956년 노동법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영향력만을 키웠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고질병’ 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투약만으로 안 되고 발본적인 치료, 즉 수술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짜릿의 쿠데타를 ‘혁명’ 으로 치장하는 논리였다.

짜릿은 이러한 ‘혁명’ 을 정당화하는 축으로서 세 가지 이념을 제창하였

다. 첫째가 '국가·종교·국왕'을 국시로 하는 국민통합 논리이고, 두 번째가 개발체제를 통한 타이 민족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쿤정치', 혁명위원회의 말을 빌리자면 '타이식 민주주의'가 그것이었다.

전前 수상 피분 역시 싸릿과 마찬가지로 피쿤정치를 이상적인 통치형태로 생각하였지만, 싸릿과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피분의 경우 자신을 피쿤과 동일시하였다면 싸릿은 자비로운 어버이로서의 국왕과, 특정 시기에 한해 어버이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싸릿은 쿠데타 직후 제일 먼저 국왕으로부터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다. 국왕에 대한 그의 충성은 극진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공포하는 일을 국왕에게 의뢰하였고, 국왕이 국내외 여러 지역을 순방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또한 국왕의 생일인 12월 5일과 왕비의 생일인 8월 12일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싸릿의 피쿤정치는 공포정치로 일관하였다. 체제비판적인 지식인, 학생, 언론인들을 방화범, 마약밀매자,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하였다. 공무원 사회 내 불순분자의 침투를 감시한다는 명분하에 정치국을 설치하였다. 또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임시헌법에 의존하여 통치하였으며 사법권까지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 1932년부터 1957년까지 25년 기간에 피분은 15년 동안이나 수상직에 있으면서 독재자로 군림하였지만 일정 정도 언론 자유 등을 보장해 주는 등 민주적 외양을 갖추려고 하였다. 하지만 싸릿 통치시기는 달랐다. 우선 싸릿은 수상 지위는 물론 육군사령관, 경찰국장관, 국가개발청 장관 등을 겸직하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완전히 봉쇄하였다. 계엄령은 헌법과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새로운 헌법 제정 임무를 맡은 헌법 위원회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노동법을 폐지하고 노동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사상 탄압이 가해지면서 투옥, 피신, 망명하는 재야 인사들이 늘어났다.



행정관료들 역시 전제적 통치방식을 통해 국가안보, 복지, 사회윤리 등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는 질서 수호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예컨대 길거리 정화 캠페인, 폭력배 소탕 등에 주력하면서 퍼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싸릿이 사망한 다음 날인 1963년 12월 9일 그의 심복이었던 타넘 육군대장이 수상에 지명되었다. 타넘은 수상 취임과 동시에 육군사령관과 국군최고사령관의 지위에 올랐다. 1년 뒤에는 뿌라팻이 육군사령관직을 이어 받았다. 그는 1973년까지 9년 동안 사령관직을 지켰다. 이로써 군과 정부의 주요 직위가 타넘-뿌라팻 2인에 의해 독점되었다. 싸릿 사망 이후의 시대를 타넘-뿌라팻 체제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타넘-뿌라팻 체제의 정국운영 역시 싸릿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싸릿이 행한 엄청난 부정축제가 만천하에 들어나면서 근대화의 영웅이자 퍼쿰으로서의 싸릿의 신화는 순식간에 무너져내렸다. 싸릿의 심복이었고 그 덕분에 수상직까지 오른 타넘이었지만 싸릿 집권시기의 도덕성 문제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타넘 신정부하에서 싸릿의 부정축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다. 1964년 11월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보고와 함께 사망한 싸릿의 재산 중 55억 바트가 국고로 몰수되었다. 당시 국가예산이 90억 바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싸릿의 부정축재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의 부패는 국왕의 보호하에 절대권력을 누리던 퍼쿰정치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절대권력은 개발주의와 근대화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자유, 시민권 등과 같은 가치는 타이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와 맞지 않는 서구적 가치로 간주되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된 개발주의 노선은 일정 시기 동안 퍼쿰정치를 뒷받침해 주었다.

## ‘퍼쿰모델’ 과 자유주의

1973년 10월 14일 학생 주도의 민주화는 도시-엘리트 사회가 성장한 결과였다. 역설적이게도 개발독재의 결과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양산된 대학생과 중산층은 퍼쿰정치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키웠고, 마침내 군부정권을 붕괴시키고 헌정체제를 복원시켰다. 이에 따라 의회와 정당활동이 재개되고 언론의 자유가 부활하였다. 학생혁명이 성공했을 즈음 타이와 인접해 있는 인도차이나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해 있었다.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노선을 보다 급진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군부정권을 무너뜨린 학생운동 지도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선정부 역시 기존의 친미 일변도의 외교노선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헌정체제의 복원에 따른 정치적 자유화는 급진화 경향을 보이고 있던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보호막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인적 구성 면에서 구체제와의 연관을 단절할 수 없는 의회와 내각은 퍼쿰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세력들을 언제까지나 비호할 수는 없었다.

1973년 10월 14일 민주화 이후 타이에서는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학생운동 지도부는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활발해졌다. 농촌에 근거지를 갖고 있었던 까닭에 군부정권의 붕괴에 별반 기여를 못하였던 타이공산당의 영향력도 커졌다. 이렇듯 학생운동과 대중운동이 급진화되자 이에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극우집단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농민운동 지도자들과 좌익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였다. 언론들, 특히 군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들도 학생들과 사회운동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중매체, 특히 라디오와 TV 방송국은 거의 대부분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군은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들 대중매체를 심리전을 벌이거나 대중을 동원하는 데 활용하던 터였다.

특히 이들 방송국들은 1975~1976년 시기에 학생시위대에 반대하는 우익

운동을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이들 대중매체를 통해 타이가 공산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국가·종교·국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처단이 불가피함을 선동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민주화를 지지하였던 중간계층과 국왕도 우익세력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다.

시민사회의 급진화를 앞장서서 이끈 세력은 다름 아닌 타이전국학생센터에서 떨어져 나온 타이독립학생연맹이었다. 이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타이공산당의 혁명노선과 거의 유사하였다. 타이전국학생센터 역시 베트남 전쟁 중에 타이에 주둔해 있던 미군의 철수와 군의 정치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제국주의, 반군벌주의 운동을 벌여나갔다. 일부 학생들은 왕정 타도를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1973년 10월 14일 이후 학생운동 간부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이 될 수 있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반자본주의 가치를 내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라는 의미의 학생신문 <아티팻>은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혁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이공산당의 주 무기인 소련제 AK-47 기관총의 사용방법까지 소개하였다. 청년이라는 의미의 또다른 학생잡지 <유와탓>에 실린 ‘혁명적 청년’이라는 제하의 시는 학생들에게 자본가와 봉건주의자, 그리고 부르주아에 맞서기 위해 무기를 들 것을 선동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르크시즘과 마오이즘에 관한 수백 개의 책과 논문이 출판되었다. 특히 1975년 초 정부가 중국을 승인하고 공산화된 인도차이나 정부들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좌익서적들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타이공산당 간부 교육용 소책자도 일반 서점과 대학서점에서 공공연히 판매되었다. 자연스럽게 학생운동권에 마르크시즘 용어가 퍼졌다. 이들이 보기에 일반 서적들은 “피착취 대중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봉건적 도구”일 뿐이었다.

여기애다가 주변 인도차이나 지역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975년 7월 북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사이공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함락하고 남베트남을 무력 해방시킨 것이다. 1년 뒤에 남베트남의 사회주의화와 남북통일이 추진되었다. 베트남과 접경해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라오스에서 군주제가 폐지되었다. 캄보디아에서는 폴 포트 정권이 불교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했다. 이 두 사건은 타이의 왕실, 불교 승가僧家, 우파세력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고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불온성에 대한 선동이 대중적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국가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나아가 학생집회와 공장 파업이 집요하게 방해공작을 받았고 이를 주도한 간부들이 테러 대상이 되었다. 1974년 3월부터 1975년 8월까지 21명에 이르는 농민운동 지도자들이 살해되었다. 1976년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는 30명 이상의 좌익정당 지지자들이 암살되었다.

이렇듯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1976년 4월 총선은 최악의 유혈 선거였다. 선거전의 쟁점은 '좌냐, 우냐' 로 압축되어 좌파 정당 입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은 '공산주의자', '왕정파괴자' 로 낙인찍혔다. 심지어 승가조직의 중심에 있던 끼티웃 법사는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도들이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악행이 아니다" 라는 설법을 하였다.

마침내 1976년 10월 6일 수요일 새벽 이미 집합해 있던 경찰, 국경수비대, 우파조직들이 탐마삿 대학을 포위하고 발포를 개시하였다. 그날 저녁 군은 쿠데타를 단행했다. 쿠데타의 명분은 "탐마삿 대학에 모인 공산주의자들이 왕세자를 모욕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하였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다. 국왕은 쿠데타를 승인하였다. 헌법폐지, 국회해산, 정당결성 금지 조치가 뒤따랐다. 군은 새로운 헌법을 통해 의회를 임명직 의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분자들' 을 재판없이 6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록 하였다. 3천 명 이상이 체포되고 서적 판매가 금지되거나 불태워졌다. 언론기관과 도서관이 폐쇄되고 출판인은 가혹행위를 당했다. 정치적 모임과 노조활동도 불법화되었다. 쿠데타 직후 신군부는 204권의 금서 목록을 제시하였다. 대학 도서관들이 수색을 당하고 압수되었으며 10만 권 이상의 도서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다. 급진화되고 있던 학생운동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타이인들에게 '흑 뿔라' (10월 6일이라는 뜻)로 불리우는 1976년 10월 6일 유혈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는 심대한 물리적 타격을 받았다. 탐바삿 대학에서의 살육,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빨갱이 사냥을 피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연이어 타이공산당의 근거지인 삼림으로 들어갔다. 그 수는 2천 명에서 3천 명에 이르렀다. 1979년 타이공산당은 1만여 명의 무장요원을 갖게 되었다. 공산당의 정부군에 대한 공세도 활발해져 정부군과의 무력충돌 횟수도 1976년 470회에서 다음해 1977년에는 1,050회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기존 공산당 간부와 새로이 합세한 학생 지도부들 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여기에다가 외부적으로는 캄보디아 내전, 중국-베트남 분쟁이 격화되면서 타이공산당에 대한 중국과 베트남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반면 1980년대에 들어와 타이 군부는 전향자에 대한 대사면 조치를 공표하였다. 타이공산당으로부터의 이탈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와서 20년 가량 지속되었던 타이공산당은 소멸되었다.

1973년 10월 14일 학생혁명 이후 타이 사회는 '퍼퓰모델' 과 자유주의의 공존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그러나 군부와 경찰 내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견제된 상황에서 퍼퓰정치에 대한 수술은 용이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주변 인도차이나 사회주의 혁명에 고무받은 학생들과 사회운동가들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퍼퓰정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미 사회 깊숙이 카리스마를 행사하고 있던 국왕 역시 좌경화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포기하였다. '흑 뿔라' 의 비극은 이

리한 배경하에서 빚어졌다.

### ‘탐마랏모델’ 과 민중주의

1973년 10월 14일 학생혁명을 이끌었고 타이의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이른바 ‘콘 드언 돌라’ 라고 불리는 10월세대는 두 번에 걸쳐 경험하였던 기억이 정신적 외상trauma이 되었다. 하나는 1976년 10월 6일의 대학살극에 대한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공산당 간부들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공산당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다.

군부정권은 ‘이념적 혼란’ 에 빠진 이들 사회운동세력에 대해 유화정책으로 대응하였다. 과거 행적을 불문에 부친 대서면이 그것이다. 이들의 ‘변신’ 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살을 기도한 활동가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수가 재계, 학계, 정계로 진출하였다. 특히 일부는 ‘참여민주주의’ 와 ‘지속적 성장’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타이에서 시민운동단체는 1978년에 제한적 수준이지만 자유화 조치가 있게 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띠기 시작하였다.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은 국가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때문에 개발주의의 폐해인 아동노동, 매춘, 마약, 환경 및 자원 문제 등이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의 관심 사안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시민운동단체들은 역설적이게도 군부와 관료가 주도한 개발주의의 수혜자이기도 하였다. 개발주의의 성과에 따른 중간계층의 성장이 시민운동단체의 인적, 물질 지지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된 군부와 관료들에 대한 온건하지만 지속적인 압력은 마침내 1988년 군 장성 대신에 하원 의원인 찻차이가 수상에 오르도록 하였다.

찻차이 내각의 출범은 1976년 대학살극으로 민선내각이 붕괴된 이래 13년 만의 이변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얼마 안 돼 실망으로 변했다. 내각에 기업인들과 재력가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이들의 부패행각이

여론의 질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의회에 진출한 지방도호들은 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실상 마피아에 해당하는 이들은 초기에는 특정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후원해 주다가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자신들이 직접 선거에 출마하였다. 막대한 선거자금을 들여 의회에 진출한 이들은 경제적 과실이 많은 각료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과거 '쿠데타의 나라' 타이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걸었던 명분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정당정치의 부패'였듯이 타이에서의 부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찻차이 민선내각을 무너뜨린 1991년의 쿠데타도 민선내각에서 민심이 떠나던 시점에 발발하였다.

그러나 군부의 판단은 시대착오적이었다. 수상직에 오른 수쩡다 장군이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시점이던 1992년 5월 14일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공동투쟁 조직인 민주주의연맹이 결성되었다.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인원이 5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것은 1973년 10월 14일 민주혁명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저항이었다. 결국 타이 민주화세력은 1973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군부정권을 몰아내는 쾌거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띠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큰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복원된 의회주의는 파편화된 정당정치와 결합되면서 연합정치에 따른 통치위기 *coalitional immobilism*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다가 부패문제까지 겹쳐 내각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었다. 이를테면 민선내각이 재출범한 1992년 9월 이후 1997년 사이 민주당 출신의 추언 수상은 자신이 거느린 각료들의 부패문제로 퇴임했고 그 뒤를 이었던 반한 내각도 매표행위가 드러나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요직인 재무부 장관직만 해도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5번이나 교체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는 이러한 부패문제와 통치위기 와중에서 발생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위기가 기득권세력의 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동시에 이들은 좋은 통치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수세력들은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의 획책”, “왕권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색깔론으로 맞섰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심화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마침내 1997년 9월 상하 양원의 압도적 지지 속에 ‘민중헌법’으로까지 불리운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다.

1997년 헌법에서 돋보이는 것은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발의, 수상 및 정부 고위관료에 대한 파면 요구, 독립적인 선거감시기구의 설치, 민선을 통한 상원 구성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가기구로서 인권위원회, 행정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설치령도 포함되었다. 대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감시위원회의 설치도 명문화하였다. 또한 새로운 헌법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도 명기하였다. 특히 새로운 헌법에 따라 인권신장을 책임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시민사회운동진영으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대를 안게 되었다.

10월세대를 대표하는 티라웃 분미가 제기한 ‘탐마랏’은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에 타이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대안을 함축하고 있다. 티라웃은 민중 부문과 주민조직,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이 새로운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다. ‘탐마랏’ 개념은 민중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경우 효율과 형평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이념에 기초해 있다. ‘탐마랏’은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은 티라웃의 ‘탐마랏’ 개념이 자본운동의 효율화를 위해 세계은행이 내걸고 있는 좋은 통치구조(good governance) 개념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헌법 제정을 계기로 타이 정치사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새로운 헌법하에서 처음 치러진 2001년 1월 6일 총선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신생정당인 통신사업 재벌 탁신 친나왓의 타이사랑당이 과반수에서 2석이 모자라는 248석을 획득하고 타이 선거사상 최대정당으로 탄생하였다.

타이사랑당의 압승은 이변이었다. 정당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타이사랑당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있던 반외세 민족주의 정서에 적절히 부응하였다. 당시 상황은 1997~1998년 경제위기 후유증 속에서 일부 기업인들까지 '국가위기 해결을 위한 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IMF 조치에 저항하는 판국이었다. 야당들은 민주당 내각이 국민경제를 외면하고 IMF와 외국인자본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여기에 다가 농민들의 불만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탁신 진영은 이러한 상황을 재빠르게 읽어낼 수 있었다. 이들은 IMF 요구에 순응한 집권 민주당의 긴축정책과 반대로 농가부채 상환의 유예, 촌락당 1백만 바트의 영농자금 지원, 30바트로 모든 진료 일괄해결 등과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대재벌 출신 탁신 진영의 교묘한 민중주의 선거전략은 유권자들의 정서에 파고들어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 탁신 내각의 출범은 국내 대자본이 핵심 정치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자본의 총체적 지배로 해석된다. 이들에게 탁신 정권이 즐겨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사회 등과 같은 용어는 '돈 정치'를 위장하려는 자본의 술수일 뿐이다. 그리고 그의 재정확대정책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융합적 정치술수로 비추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도전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권은 민중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의 문제까지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탁신 정권의 자신감은 때때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에 권위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

과거 탐마랏을 조직화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진영과 1973~1976년 시기에 자유주의의 급진화를 시도하였던 사회운동세력과의 결정적 차이는 국왕의 카리스마와 자유주의의 급진화의 공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 시민사회진영은 국내 대자본이 주도하는 민중주의의 '반민중성'을 어떻게 폭로하고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이들이 불 때 과거의 퍼퐁은 총, 칼로 무장하고서 '타이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였다면, 21세기 초엽의 퍼퐁은 총, 칼 대신에 엄청난 돈으로 치장하고서 민중권력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

---

박은홍 [einskor@hanmail.net](mailto:einskor@hanmail.net) |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편집위원.  
저서로 "동아시아의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전환"(공저),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공저), 논문으로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의 형성과 진화」, 「동남아시아와 사회적 자본」 등 다수가 있다.